

오늘의 주요기사

2023 2 20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의회

江原日報	[]	3	1
江原日報	[]		2
강원도민일보	03		3
江原日報	03		3
江原日報			4
		,	5
강원도민일보	12	' '	6
江原日報	12		6
		,	7
		..	8
江原日報	03	316	289
강원도민일보	03	,	10
강원도민일보		" , "	... 10
江原日報	18	[]	' ' ... 11
江原日報	21	" . "	12
江原日報	10		12
江原日報	14		13
江原日報	10A		14
강원도민일보	13	[] ()	14
江原日報	21	[] ()	14
江原日報	02	" "	15
江原日報	02	2 3	16
江原日報	03	' ' ...	17
江原日報	07 400	17
江原日報	22		18
강원도민일보	10	" 가 "	19
		' '	20

강원도민일보	27	.	'	.	'	21
강원도민일보	04		'		'	22
江原日報	10	.	가	GTX-B 4		22
강원도민일보	21	[]			23
강원도민일보	21	[]			24
江原日報	19	[]			25
江原日報	19	[]	'	,	26

江原日報

2023 02 19 ()

[포노뉴스]양구군당구연맹 3쿠션 당구대회



2023 양구군 당구연맹 스카치더블 3쿠션 당구대회 개회식이 지난 18일 문화체육회관에서 서흥원 군수와 이기찬 도의회부의장, 김호영 연맹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江原日報

2023 02 19 ()

[포토뉴스] 양구군 귀농귀촌협의회 정기총회



양구



양구군 귀농귀촌 협의회 협회장 취임식 및 정기총회가 지난 17일 친환경농업연구센터에서 서흥원 군수와 이기찬 도의회부의장, 김선목 부의장 및 군의원, 김법종 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원도민일보

2023 02 20 ()
03



강원미래정책연 유니온파크 방문 강원미래정책연구회는 지난 17일 경기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유니온파크를 방문해 강원도 적용사례를 연구했다. 강원도의회 제공

江原日報

2023 02 20 ()
03

도의회 강원미래정책연구회
하남 폐기물처리시설 시찰

강원도의회 강원미래정책연구회 (회장:최재민)가 경기도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을 현지 시찰했다.

연구회는 지난 17일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파크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로부터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국내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물놀이 시설과 공연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 환경 분야에서 신개념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정윤희기자

江原日報

2023 02 19 ()

강원도의회 하남 유니온파크 현지 시찰



강원도의회 강원미래정책연구회(회장:최재민)는 지난 17일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파크를 방문했다.

강원도의회 강원미래정책연구회(회장:최재민)가 경기도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을 현지 시찰했다.

연구회는 지난 17일 경기도 하남시 유니온파크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로부터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를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하남 유니온파크는 국내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물놀이시설과 공연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 환경 분야에서 신개념 성공 사례로 꼽히는 곳이다.

최재민 연구회장은 "이번 현지시찰을 통해 자원 재순환의 관점에서 도의 미래 환경정책을 고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미래정책연구회는 기후 변화와 환경, 농산어촌 인구 소멸, 저출산 고령화, 연금 개혁 등 도의 미래정책을 고민하는 모임으로 젊은 도의원 9명으로 구성됐다.

춘천MBC

2023 02 17 ()

도의회 미래 정책 연구회, 폐기물 시설 현지 시찰

강원도의회 미래 정책 연구회가

경기도 하남시의 폐기물 처리 시설인

유니온 파크 현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하남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에 물놀이 시설과

공연장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조성해

환경 분야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의원들은 유니온 파크를 둘러보며

강원도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했습니다.

도의회 미래 정책 연구회는 45살 이하의

젊은 의원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2023 02 20 ()
12

강원도민일보

옥계항 환동해권 물류거점항만 육성 '청신호'

권혁열 등 도의원 5명 공동발의
개정안 최종의결 도비 지원 포함
2025년 전국항만계획 반영 총력

강릉 옥계항의 환동해권 물류거점항
만 육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권혁열·박호균·심오섭·최승순·
김용래 도의원의 공동 발의로 최근

강원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 상정
된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최종
의결, 도비 지원대상 항만에 옥계항
이 포함됐다.

조례가 공포되면 도내 지방비 재정
지원 대상 무역항의 범위가 기존 동
해·목호항, 속초항에서 옥계항을비
롯 도내 지방관리무역항과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강

릉시는강원도환동해본부,강릉시의
회와 협의를 거쳐 가칭 '강릉시 무역
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의 조
속한 제정을 추진한다.

옥계항을 이용해 컨테이너수출입
물류를 창출할 화주·국제물류주선
기업, 해상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등 관련 기업 및 투자 유치를 가속화
해 물동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옥계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전환과

항만 증설(10선석,10만t급 접안)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025년에 실시
되는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는작업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 관계자는 "항만 기능이 확대되
면 환동해권 복합물류거점도시로의
도약은 물론 기업 물류비 절감, 일자
리 창출, 인구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고 말했다. 김우열

2023 02 20 ()
12

江原日報

강릉 옥계항에 도비 지원 활성화 속도

도의회 조례 개정안의결 ... 시도 내달중 지원 조례 제정
시 "10만톤급 접안 가능 항만 증설 방안 정부에 제시"

【강릉】강릉 옥계항이 강원도
의 지원 대상 무역항에 포함
됨에 따라 강릉시가 옥계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운항
장려금 지급을 추진하는 등
옥계항 활성화를 위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19일 강릉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도의회 제316회 임시
회에서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
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며 도비 지원
대상 항만에 옥계항 등 도내 모
든 무역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호균 도의원이 대표 발의
한 개정 조례가 최종 공포되면

도내 지방비 재정 지원 대상
무역항의 범위가 기존 동해·
목호항과 속초항에서 옥계항
을 비롯한 도내 모든 지방관리
무역항과 국가관리무역항으
로 확대된다.

이를 계기로 강릉시도 강원
도환동해본부, 강릉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중 가
칭 '강릉시 무역항 국제항로 활
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조례에는 옥계항

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한 운항
장려금, 화물 유치 장려금을 지
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시는 또 옥계항을 이용해 컨
테이너 수출·입 물류를 창출할
화주·국제물류주선기업, 해상
운송기업, 항만하역기업 등 관
련 기업 및 투자 유치를 가속화
해 물동량을 늘려 나갈 방침이
라고 설명했다.

김흥열 시 항만물류과장은
"우선은 옥계항 기존 부두를

이용해 강동면 남동발전소에
서 사용하는 우드펠릿 컨테이
너 물동량을 유치하겠다"며
"부산항을 이용하는 관내 기업
들의 수출 물량을 처리하는 수
준에서 시작해 궁극적으로 환
동해권 복합물류거점 국가항
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10선석,
10만톤급 접안이 가능한 항만
증설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시
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달순기자 dsgo@kwnews.co.kr

2023 02 17 ()



강릉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강릉시가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오는 6월까지 제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컨테이너 물동량 창출과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옥계항을 이용하는 무역선 등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입니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어제(16일) 도비 지원 대상을 기존 동해항과 속초항에서 도내 모든 무역항으로 확대하는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김보람

2023 02 17 ()

MBC 강원영동

무역항 재정지원 확대.. 강릉 옥계항 활성화 기대

이아라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발의된 강원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강릉 옥계항의 물동량 확대와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이번 개정 조례가 최종 공포되면 강릉 옥계항을 이용하는 화주와 해상 운송과 국제 물류 기업이 동해항과 묵호항, 속초항과 같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를 계기로, 환동해본부와 시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강릉시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江原日報

2023 02 20 ()
03

도의회 정책지원관제 안착 316회 임시회 실적 289건 정원 개정 통해 증원 방침

강원도의회 정책지원관 제도가 뿌리내리면서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11대 도의회가 개원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달 마무리된 제316회 임시회까지 정책지원관 지원 실적은 289건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조례안 입법지원 82건, 서면 질의 등 일반 현안 94건, 도정질문 45건, 예·결산 심사 9건 등이다.

도의회는 현재 18명이 활동 중인 정책지원관을 올 4월 정원 개정을 통해 24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증원이 완료되면 도의원 2인당 1명씩 정책지원관이 배치된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과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특히 도의회는 학위, 근무 경력 기준이 높은 상위 직급으로 채용을 진행해 우수 자원을 선발했다. 이 결과 기초 의원, 국회 보좌진, 한국법제연구원 등을 거친 경력자와 석·박사 학위자 등의 재원이 몰려들었다. 정윤희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2 20 ()
03

도의회 명예의장 조례 논란, 국힘 의원간 소통부재 확산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조례 논란이 국민의힘 의원들 간 소통 부재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명예의장 운영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일부 국민의힘 소속의원들이 "명예의장 조례에 대한 반대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원내대표단 사퇴가 언급되기도 했다.

초선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민 대변인은 19일 "의원들끼리 소통이 되지 않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초선의원들은 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박찬홍 원내대표는 "3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더 묻겠다"며 "갈등으로

비쳐져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조례를 발의한 이기찬 부의장은 이날 본지에 "강원도를 돕고 싶은데 통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부분이 필요해 조례를 추진한 것"이라며 "절차대로의 결한 것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해당행위(害黨行爲)"라고 반박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임명희)은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공적이 없어도 예상해서 의장직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마음만 먹으면 도민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의장직에 앉힐 수 있다는 말"이라며 "도민자치권 실현과 민주주의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설화 lofi@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2 19 ()

정의당 강원도당 "도의회 명예의장직, 도민 공감대 없어" 조례 철회 촉구

강원도의회가 '명예의장'직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정의당 강원도당이 "도민 공감대 없는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지 말라"며 관련 조례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위원장 임명희)은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도의회는 강원도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게 명예의장을 주자고 하는데, 공적의 크기를 따지는 것 자체가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도당은 "공적이 없어도 예상해서 의장직을 줄 수 있다는 말은 의석 다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마음만 먹으면 도민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적절한 명분을 붙여 의장직에 앉힐 수 있다는 말"이라며 "명예직이라고는 하나 도민들이 모르는 사람, 공감대가 없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 입법기관의 의장 명함을 다는 것은 도민자치권 실현과 민주주의 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유치, 현물판매 지원 등 명예의장직 업무는 이미 기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홍보대사, 자문위원과 사업이 중복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례 철회를 요청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16일 2차 본회의에서 도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도 발전을 위한 기업유치 및 현물판매 지원, 도의회 의정 홍보 등 역할을 담은 '강원도의회 명예의장 운영 조례'를 의결했다.

일부 의원들은 의장직 오·남용 등을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냈다. 최재민 도의원은 지난 16일 논평을 내고 "'명예의장'이라는 새 직책을 만드는 것은 도민의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다. 앞으로 '명예의원'을 위촉할 개연성도 있다"며 "도민 혈세로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냈다.

江原日報

2023 02 20 ()
18

속초 문화예술 미래 투자 ‘밀레니엄 아트센터’ 제안

확대경



강정호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문화예술의 발전은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갖추게 할 뿐 아니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분야다.

독일의 아티스트 요셉 조이스 (Joseph Beuys)가 ‘누구나 예술가다’라는 명언을 남겼듯 모든 사람에게는 잠재된 창의력이 있다는 것이 문화예술의 출발점이고, 문화예술을 통해 문화의 다양성과 사회적 포용력을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예술은 고독함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경제 침체로 상처투성이가 된 시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은 예술이다. 이에 더해 K-POP, K-드라마 등 문화예술을 통한 한류의 확산에서 보았듯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굴뚝 없는 공장’, 즉 산업적인 기능까지 지니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속초문화예술회관을 살펴봤다.

1990년 건립된 후 2017년 리모델링을 마친 속초문화예술회관은 579객석을 보유하고 있다. 속초시가 많은 예산을 들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이처럼 적은 객석 수와 무대 및 주차 공간의 협소 등을 이유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속초시가 품격에 맞게 수준 높은 다양한 분야의 공연을 기획, 제공하려면 지금의 문화예술회관으로는 한계가 있다. 명성 있는 공연을 섭외하려 하거나 대형 콘서트를 유치하려 해도 공연사 측에서 객석 수가 적다며 거절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타 시·군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내역을 살펴보면 많은 국·도비가 지원된 것에 비해 속초시는 가장 먼저 건립되면서 비용이 상당히 적었고 객석 수도 가장 적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는 지역 내 대학의 아트홀이 별도로 있어 많은 행사와 공연도 진행할 수 있다.

속초시는 2027년 동서고속철도와 동해북부선철도가 동시에 개통되고 양대 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노학동 소야별 일대는 국토교통부의 투자선도지구로 선정돼 도시의 큰 확장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속초항에 있는 국제크루즈와 여객선도 정상 운영을 앞두고 있어 대한민국 최고 관광도시에서 글로벌 해양 문화관광도시로 성장이 기대된다.

특히 속초시는 지난해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되는 큰 수확을 얻었다. ‘공존문화도시 속초, 시민의 문화적 삶이 생동한다’를 사업명으로 가졌는데 심시를 한 문화도시심의 위원들은 ‘지역관광은 성장하고 있으나 주민의 문화 향유는 위축돼 있어 관광산업과 지역 주민의 문화적 삶이 함께 공존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속초시는 이런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속초시의 자체 예산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다.

시민 공감대를 얻는 것부터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인식을 바꾸자! 문화예술에 투입되는 비용은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초의 미래를 위한 투자다. 우리 시민들은 대형 공연을 보기 위해 타 도시로 원정을 간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은가? 서두르자! ‘밀레니엄 속초 아트센터’ 건립을 제안한다.

2023 02 20 ()
21

江原日報

“약사의 윤리·전문성 다해 보건의료계 현안 대응”

도약사회 정기 대의원총회

강원도약사회는 지난 18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2023년 제 69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등 보건의료계의 현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리와 전문성을 다해 약사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김진태 지사, 허영(춘천갑)·노용호(비례) 국회의원, 하석균·이승진·원제용 도의원, 이종국 강원대 약대 학장 등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김진태 지사는 “도내에서도 현재 의료취약지 문제, 약 배달



◇2023년도 강원도약사회 제69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지난 18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김진태 강원도지사,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유영필 도약사회장, 전승호 도약사회 총회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박승선기자

문제 등 보건의료 현안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도를 출범할 때는 약사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가

지 의견과 조언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공공 심야약국 확대, 공공 전

자 처방전 시스템, 대체조제 간편화 등 여러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디지털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이지만 그중 나타날 수 있는 불법 문제, 비인간화되는 문제 등은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유영필 강원도약사회장은 “2023년 한 해 동안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보건의료 현안에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각 지역 분회의 화합을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서희기자 wiretheasia@

2023 02 20 ()
10

江原日報

춘천 강북 현안 해결 물꼬트나 주목

한기호 의원-육동한 시장 오늘 정책간담회

【춘천】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과 육동한 춘천시장이 춘천 강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한 의원과 육 시장은 20일 오후 1시30분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시장의 공식적인 첫 간담회로 최근 도청사 신축 이전지역 선정 이후 강북지역의 여러 현안사업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의원과 육 시장의 공식적인 만남도 벌써 두 번째다. 앞서 한 의원은 육동한 시장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30일 시청을 방문해 신동 옥산포부터 신동삼거리 950m 구간 확장 등에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찬홍·양숙희 도의원과 춘천시의회 정경옥 운영위원장, 김보건 기획행정위원장, 김운기 경제도시위원장을 비롯해 김용갑·박제철·지승민 시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간담회의 주요 현

안 협의 사항은 노루목저수지 활용 방안과 소양8교 건립사업 등이 꼽히고 있다. 신동 옥산포~신동사거리 구간 950m 확장, 추전리~조교리 교량 및 도로 개설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 의원이 지난해 11월 제안했던 춘천, 흥천, 화천, 양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조성하기 위한 춘천시 북산면 내평리와 조교리 일원 교량과 접속도로 건설, 북산면 주곡리와 흥천군 두촌면 원동리 간 도로의 지방도 승격 등은 현재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이 구간 도로의 지방도 승

격을 강원도에 건의한 상태다. 또 북산면 내평리~조교리 도로 개설공사의 경우 사업비 등을 고려해 노선을 북산면 추전리에서 조교리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의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위해 현재 타당성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올 7~8월 지구 지정이 이뤄지면 2025년부터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원은 간담회가 끝나면 소양8교 건립예정지 등에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장현정기자

동해 무릉별 유천지 또한번 변신

시 이철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 공조 모색
이달 중 5억 투입 2단계 관광발전 용역 추진

【동해】이철규 국회의원과 동해시가 석회석 폐광지의 친환경적 복구를 통한 차별화된 관광지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17일 동해시청에서 열린 이철규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시와 이 의원은 ‘무릉별유천지’ 1단계 선도사업에 이은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로 했다.

무릉별유천지는 동해시가 삼화동 산110-3 일원 93만4,890㎡의 석회석 폐광산을 재창조한 전국 첫 사례다. 이색경관을 활용한 복합체험 관광휴양거점 육성 및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신개념 관광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1단계로 다양한 체험시설과 2개의 에메랄드빛 호수를 품은 이색적인 관광명소를 조성했으며 2단계 공공사업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활용한 힐링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빠르면 이달 중 5억원을 들여 석회석 폐광지 친환경 관광 발전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과 보좌진, 김기하·최재석·유순옥 도의원, 심규언 시장과 시·국·과장들이 참석했으며 동해

시의 현안사업과 국책사업, 2024년 국·도비 확보 대상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철규 의원은 “동해시가 하려는 사업들이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의원실에)동해시민의 이름으로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

심규언 시장은 “국회의원, 도의원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요 현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익기기자

江原日報

2023 02 20 ()

10A



홍천향교 신임 전교 취임식 홍천향교는 지난 18일 향교에서 신영재 홍천군수, 박영록 홍천군의장, 이영욱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상호 전교 및 이돌이 성균관유도회 홍천군지부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강원도민일보 江原日報

2023 02 20 ()

13



문관현(태백) 도의원은 20일 오전 10시 30분 태백

황지초교에서 열리는 황지초운영위원회에 참석, 지역 주민들과의 시간을 갖는다.

2023 02 20 ()

21

황지초교 운영위원회

◇문관현강원도의원(태백)



은 20일 오전 10시 30분 황지초교에서 개최되는 황지초교 운영위원회에 참

석.

江原日報

2023 02 20 ()
02

김완섭 기재부 예산실장 “강원 현안사업 꼼꼼히 살필 것”

지사 면담 후 사업 현장 점검

원주 출신인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17일 춘천을 방문해 김진태 지사를 면담하고 지역 현안 사업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김 실장의 춘천 방문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춘천의 주력인 바이오산업을 점검한 바 있다.

김진태 지사와 김완섭 실장은 이날 막국수로 오찬을 함께한 후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반도체 산업 등 강원도 주요 핵심사업들의 올해 정부예산 반영에 대해 감사를 표한 후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 시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구축 등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또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정부 예산 반영도 요청했다.

김 실장은 면담 후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과 함께 소양8교 건설 추진 현장과 강원도청 신청사 및 행정복합도시 핵심 교통망인 동내면



◇지난 17일 춘천을 방문한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오른쪽)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강원도 정책 비전과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박승선기자

고은리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추진 현장을 살펴봤다.

김한수 기초실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부처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향후 부처 협의 완료 후 사업비 반영 요청 시 적극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완섭 실장은 “내년 정부예산 편성 과정에서 강원도 현안사업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최기영기자 answer07@

/ 기획-의료취약지, 코로나19 3년을 말한다 /

오는 22일로 강원도에서 첫 번째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꼭 3년이 된다. 코로나19 강원도 1호 확진자는 2020년 2월 22일 춘천에서 발생했다. 접경지와 폐광지, 영동지방을 중심으로 의료취약지가 다수 분포하고,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비율이

높은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로 부실한 의료체계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본보는 코로나19 3년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건강과 돌봄 불평등 실태를 되돌아보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민들이 지역에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원인 모른 채 사망 2년간 3천명

(상)진단조차 못 받고 숨지는 사람들

코로나19 이후 강원도 내에서 제대로 된 진단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통계청의 1998~2021년 '사망원인통계'를 바탕으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사망한 사례를 이르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항목 자료(연령표준화)를 분석한 결과 2020~2021년 사이 강원도 내에서 이처럼 사망 원인조차 모른 채 숨진 사람은 2,922명에 이른다.

의료계에서 이른바 'R코드'로 불리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 항목은 의료기관에 이송된 환자가 사망했음에도 진단명 또는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사망진단서에 기록되는 사인이다.

코로나19 이전인 2018~2019년 2년간 2,183명에 비해 739명이 증가했다. 2021년도 기준 인구 10만명당 36.2명을 기록,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국 평균은 2021년 기준 30.5명으로, 강원도가 전국 평균보다 약 1.2배 더 많았다. 인구 10만명당 인원수로는 5.7명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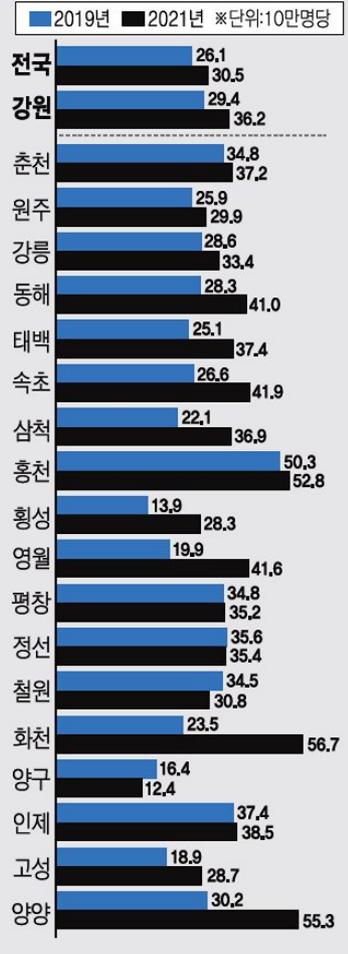
코로나 이전보다 739명 증가 증가율 가장 높은 지역 '화천' 필수의료 공백 등 영향 분석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춘천·원주·강릉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료취약지에 해당하는 강원도의 특성상 '필수의료 공백'이 이와 같은 현상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화천으로, 2019년 23.5명에서 2021년 56.7명으로 무려 2.4배나 급증했다. 인원수로도 20명이 늘었다. 다음으로는 영월로 2019년 인구 10만명당 19.9명에서 2021년 41.6명으로 2.1배가량 증가했다.

임준(예방의학 전문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민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도에서는 코로나19 시기 공공병원이 확진자 진료에 집중하면서 환자들이 질환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집에서 사망하는 사례 등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심뇌혈관 사망 등이 정확하게 진단되지 못한 채 원인

강원도 내 지역별
원인미상 사망률(연령표준화)



미상으로 사망한 사례 등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서화기자 wiretheasia@

2023 02 20 ()
03

江原日報

‘평화경제특구’ 눈앞에 ... 접경지 발전 날개 단다

국회 외교통일위 17년 만에 법률안 통과

본회의 가결 시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 혜택 조세·부담금 감면 등 특례 ... 산단·관광특구로 개발 가능

속보=강원도 내 접경지역이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돼 발전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본보 지난 16일자 8면 보도)’을 의결했다. 평화경제특별법은 북한 인접 지역에 ‘평화경제특구’를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정(파주읍) 의원, 윤후덕(파주갑) 의원,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 연천) 의원의 안을 통합해 심사해 대안가결했다. 그동안 이 법이 의통위 전체회의에 오른 적은 있지만 통과한 것은 2006년 발의된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향후 법제처 심사

와 본회의 상정 및 통과 등 가결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원도 내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춘천 등 6개 시·군을 비롯해 경기 김포·고양·파주·연천·동두천·포천·양주, 인천 강화·옹진군 등 15개 기초단체가 혜택을 보게 된다.

평화경제특별법안은 통일부·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평화경제특별구로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사업시행자는 토지 수용·도로·상하수 시설

등 기반시설과 조세·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을 개발할 수 있다. 임주기업은 국제·지방세 감면, 조성 용지 임대료 감면,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남북교역·경협 사업을 할 때 남북협력기금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다. 접경지역관 경제자유구역인 셈이다. 이미 강원도는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한 사업 준비에 나서고 있다. 철원군은 생명 바이오 등을 특화시키는 내용의 용역을 마쳤고, 고성군도 올 4월 관련사업 용역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해용 강원도 접경지역과 교류협력팀장은 “당초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에 평화경제특별법 내용을 포함시켰다가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법안이기에 때문에 제외시켰었는데,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히려 잘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이 팀장은 “이미 관련 사업이 진행되는 철원, 고성과 함께 춘천 화천 양구 인제 등 기초자치체와 협의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이하늘기자2sky@kwnews.co.kr

2023 02 20 ()
07

江原日報

태양광 인기 시들·경기 침체까지 ... 400억 이상 감소

전기공사사업

지난해 강원도 내 전기공사사업계의 기성실적이 4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라진 태양광 호재와 건설경기 침체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국전기공사협회 강원도회의 ‘2022년 전기공사 실적신고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도내 1,063개 업체의

1,063개 업체 8,737억원 집계
건설공사 물량 감소에 하락세

총 기성실적은 8,737억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9,181억원)과 비교해 444억원(5.1%) 감소했다. 업체당 평균 기성액은 8억2,191만원이었다. 역시 1년 전(8억2,652만원) 대비 소폭 줄었다.

업체별 기성액은 태양광전문업체인 유한회사 명성전기가 180억7,6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1위의 기성액이 289억2,010만원((주)한마음에너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위권 업체들에서도 실적 감소가 확인됐다. 2위는 이전 업체인 (주)우진일렉트(179억3,800만원)가 차지했고, 이어 (주)동성, (주)한마음에너

지 순이었다.

기성실적 감소에 대해 전기공사사업계는 정권 교체와 함께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인기가 낮아진 점이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와 전기공사가 함께 이뤄지는 만큼 건설공사 물량이 줄며 전기공사 물량도 함께 감소한 점도 원인으로 꼽혔다. 김현이기자 haha@

강원도 대표 문화 프로그램들이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인해 파행 운 영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3년마다 지역을 순회 하며 개최되는 노마딕(Nomadic·유랑하는) 시각예술 축제인 ‘강원국제트리엔날레’는 지난해 예산 5분의 1 수 준으로 올해 축제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다. 그동안 도내 유희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시도로 호평 을 받은 이 행사는 도립미술관도 갖추지 못한 강원도에서 청소년들에게 체험의 기 회를 제공하고 예술가들을 발굴한 것은 물론 독특한 아 이디어와 실험적인 시도로 주목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 제는 예술감독조차 선임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지 원 방향이 결정되면서 일각에서는 폐지 수순을 밟고 있 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예산 삭감에 음악 끊긴 겨울 대관령



◇지난해 열린 제19회 평창대관령음악제 폐막공연 모습. 첼로 신동으로 불리는 원 주 출신 첼리스트 한재민이 연주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작가트리엔날레 2022가 평창 진부면 일원에서 개막했다. 사진은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들 모습.

(2) 위태로운 대표 브랜드

2016년부터 매년 겨울 선보여 온 평창대관령음악제 ‘겨울음악제’의 경우 예산 항목 자체가 사라지면서 폐지됐다. 여름철에 열리는 ‘평창대 관령음악제’가 정통 클래식 음악제 를 표방했다면 겨울음악제는 다양 성과 차별성을 테마로 한 무대로 클 래식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코 로나19 상황에서도 높은 예매율을 기록하며, 유튜브 중계도 큰 인기 를 끌었지만 서슬 퍼런 예산 삭감 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다.

대관령음악제 겨울 공연 폐지 국제트리엔날레도 파행 위기 도 “적정한 규모에 맞게 진행”

평창대관령음악제 사정도 녹록 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올해 20주 년을 맞았지만 도비는 지난해 16 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 다. 20주년을 기점으로 인력 보강 이나 공연장 마련 문제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예상됐지만 당장 올해 공연이 제대로 열릴지 여부 부터 신경 써야 하는 처지다. 아스

펜, 잘츠부르크 음악제처럼 여름 에는 항상 대관령에 음악이 흐른 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축제로 성 장시키겠다는 그동안의 노력과 계 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강원트 리엔날레와 대관령음악제 모두 예 산은 줄었지만 폐지되는 것은 아니 다”라며 “반드시 많은 예산을 투입 해서 치르는 것보다 예산이 줄더라도 적절한 규모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경환 미술평론가는 “강원도 가 트리엔날레를 도민을 위한 문

화 향유, 문화 인프라 자산 등의 차 원에서 인지한다면 예산을 줄일 수 없을 것”이라며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행사가 바로 트리엔날레 이다. 강원도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영진 음악평론가는 “지금 당장 음악제의 ‘자생’을 얘기하는 것은 어 불성실이다. 음악제가 차별성을 가 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이 안정 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를 위 해서는 기업 메세나가 차지하는 비 중을 높이는 구조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민희·이현정기자

2023 02 20 ()
10

강원도민일보

“도청사 들어서면 어디가서 농사지을지 막막”

르포 | 강원도청 신청사·행정복합타운 부지 '고은리373번지' 가보니

19일 오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강원도청 신청사 부지로 낙점된 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일대는 한산했다. 소규모 논밭이 이어진 가운데 개량된 한옥 형태의 집들이 듬성 듬성 보였다. 늘어선 비닐하우스와 곳곳에 멈춰서있는 농기계가 이곳이 농업 중심 마을이라는 사실을 짐작케 했다. 농번기가 지난 탓인지 이른 시간 탓인지 마을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당장 농사짓는 주민들은 걱정이 앞섰다. 김모(34)씨는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 주민 대부분이 대규모 대출을 받고, 오랜 기간 갚아나간다. 보상금을 받는다고 해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남은 돈으로 이사 갈 집이나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저는 다행히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 상대적으로 걱정이 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 30여 마리를 키우며 축산업을 하는 원모(64)씨는 한숨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축사는 민가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등의 문제로 이전이 쉽지 않다”며 “더욱이 보상금으로 예컨대 3.3㎡당 10만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면, 인근 축사용 부지 시세가 이보다 올라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평생을 살아온 마을을 떠나야

“평생 살아온 마을 떠나야 해”
농업·축산업 종사 주민 한숨
부동산 거래 위축 빈 집 발생
고은리, 보상관련 의견 수렴

이주대책 발표 없어 혼란 가중
“도·시 주민 설명 있어야” 지적

한다니 마음이 무겁다”며 “도에서 축산용 부지를 구해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일부 주민들은 도청 이전을 반기기도 했다. 이화자(70)씨는 “2년 전부터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는 바람에 혼자 복숭아 농사를 짓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농사를 그만두고 싶어서 땅을 내놓으려고 했는데, 도청이 들어와 보상을 해준다니 잘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A씨도 도청 이전에 긍정적이었다. 그는 “도청 이전지가 한 차례 바뀌면서 소유하고 있는 땅이 수용부지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며 “부동산 가격이 조금 오르지 않겠나 기대하게 됐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1년 전 고은리로 이사 왔다는 B씨



19일 오전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대 전봇대에 부동산 매물을 구한다는 전단지들이 붙어있다.

는 “인근에 비어있는 새 집이 5채 정도 있다”며 “도청 이전이 발표된 이후엔 이사 오기도 애매한 데다 전·월세를 놓자니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양승훈(59) 고은리이장은 조만간 변호사 자문을 구하고 보상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양이장은 “평생 농사를 지었는데, 어디로 가서 뭘 해먹고 살아야 할지 걱정이 크다. 이전지로 발표만 났을 뿐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며 “이주대책 등에 대한 도나 시 차원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청 이전 소식에 고은리 일대 부동산 매물은 모두 사라졌다고 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3.3㎡당 50만~150만원 사이에 거래가 이뤄졌으나, 도청 이전 발표 후 가격 상승 기대감에 부동산 소유자들이 매물을 모두 거둬들였다”며 “매물이 없어 현 시세를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최근 2028년까지 고은리 373번지 일원 10만㎡ 부지에 도청 신청사를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주변에는 학교와 공공기관, 상업 시설이 들어서는 등 총 100만㎡ 규모의 행정복합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 오는 3월 2일까지 14일간 주민 열람공고를 내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배상철

2023 02 19 ()

MBC 강원영동

'강원특별도민의 날 제정 조례안' 입법 예고

김인성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6월 11일을
'강원특별도민의 날'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도민들의 긍지와 애郷심을 높이고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6월 11일을 '강원특별도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해당 조례에는 조례 제정 목적과
특별자치도민의 날 기념행사의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 달 9일까지
기관이나 개인의 의견을 접수 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2 20 ()
27

삼척시·강원대 ‘지역소멸·학령인구 감소’ 해결 협력

지역발전포럼 개최 협력체계 구축
수소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 논의

삼척시(시장 박상수)와 강원대(총장 김헌영)가 지역소멸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등 지역과 지역 대학이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삼척시와 강원대는 최근 강원대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연구관에서 ‘삼척시-강원대 협력기반 지역발전포럼’을 개최하고 지방소멸위기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과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 이철규 국회의원, 박상수 삼척시장, 정정순 삼척시의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인재 양성, 수소 신산업 일자리 창출, 지역 의료시설 확충방안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



삼척시와 강원대는 최근 강원대 삼척캠퍼스 그린에너지연구관에서 이철규 국회의원, 박상수 삼척시장, 정정순 삼척시의장, 김헌영 강원대 총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척시-강원대 협력기반 지역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조형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정책팀장, 조희숙 강원대 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최종훈 강원도 에너지과장, 윤종철 강원대 기획지원처장이 발표에 나섰다. 남우동 강원대 병원장, 윤정의 강원대 삼척부총장, 조인성 삼척시 경제진흥국장,

김권종 강원도 균형발전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지방소멸과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과 대학이 이번 포럼을 계기로 힘을 합쳐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민엽

2023 02 20 ()

강원도민일보

04

춘천이 쏘아올린 ‘버스 무료승차 연령 상향’ 논의 관심 집중

현 65세 이상, 연 45억원 추산
단계적 조정 필요 제기 대책 고심
저소득층 부담 등 지역 의견 양분

대중교통요금 무료승차와 관련한 연령 상향 논란이 강원도내까지 확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본지 취재 결과 춘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다. 이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

터에서 ‘봄내카드’를 발급해 한달에 최대 20회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매달 자동으로 20회가 충전된다.
춘천시는 지난 한해동안 이 제도로 19억 8000만원을 소요, 지역내 65세 이상 인구 5만 6000여명 중 4만 1000여명(72%)이 발급했다. 더욱이 올해는 무료승차 제도로만 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만 65세가 되는 1958년생 신규 봄내카드 발급자를 1만 명으로 추산하는 데다 지난 1월부터 춘천 시내버스 이용금액이 현금가 1700원으로 작년(1400원) 대비 20% 이상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영배 춘천시 의원은 최근 열린 춘천시의회 32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버스 무료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노인 복지연령인 65세 기준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 조항으로 40년이 넘었다. 버스 무료승차 대상 연령을 단계적으로 70세로 조정해야 한다”며 “시대 변화에 대응해 후손들에게 짐 지우지 않고 튼튼한 사회를 물려주는 대응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의견도 양분되고 있다. 이모(69·석사동)씨는 “은퇴 이후 금전적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교통비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집에만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권모(64)씨는 “제도 개선 취지는 공감하고 있지만 일괄 적용하기 보단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거나 일일 횡수를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춘천시는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수심 역원의 시비가 소요되고 있지만 65-70세 이상 연령층들의 호응이 높기 때문이다. 춘천시가 버스 탑승객 현황

을 분석한 결과 65-70세 이용객이 전체 어르신 이용객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구체적인 검토는 없지만 전국적으로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회적 논의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설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장은 “노인들이 많이 이용해 적자 발생한다는 논리에서 관련 정책을 개선한다는 것에는 반대 입장”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순차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은 신재훈

2023 02 20 ()

江原日報

10

춘천·가평 GTX-B 4개 역사 설치 검토

4월 타당성 조사 결과 나와
시 “정부 발표 나오기 전 건의”

【춘천】속보=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연장 타당

성을 조사(본보 2022년 6월 24일자 16면 등 보도)하면서 4개 역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전문기관에 의뢰해 GTX-B 노선 연장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비용은 가평군과 각각 절반씩 부담했으며 결과는 올 4월 중순에 나올 예정이다.

타당성 조사 중인 연장 노선 길이는 가평과 춘천 28km씩 총 56km로 역사는 기존의 춘천역과 남춘천역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GTX-A·B·C 노선 연장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춘천시와 가평군은 타당성 조사를 거쳐 B 노선 연장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강원도는 GTX 전담팀을 가동 중이며 경기도는 B 노선 연장을 포함한 ‘GTX 플러스’ 기본 구상을 마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GTX 연장 방안 검토 결과가 6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그 전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대 입구~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남양주 별내~마석 82.7km에 계획된 GTX-B 노선은 내년 착공 예정이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강원도민일보

2023 02 20 ()
/ 21

기형적 선거구 더 이상 없어야

-정서다른 행정지역 한데 묶여대표성 약화

22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위에서는 선거구 개편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의 이목이 쏠립니다. 소선거구 유지와 중대선거구제 전환 여부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도내 유권자들은 무엇보다 지역 정서가 다른 행정지역을 한데 묶는 기형적인 선거구 획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총선 때마다 여러 개 시·군을 합하는 선거구 때문에 지역대표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획정 과정에서 이들 복합선거구에 대한 합리적 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원도 8개 선거구 중 시와 군지역이 한데 묶이거나 군 지역으로만 구성된 복합선거구는 4곳입니다. 지역마다 떼었다 붙이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전무후무한 기형적인 선거구가 생겼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선거구 획정 당시에는, 강원도 정치 1번지인 수부도시 춘천마저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을'이라는 이상한 선거구로만 들어졌습니다. 더구나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는 춘천지역 19개 읍면동으로만 구성됐음에도, 춘천 외 3개 지역 이름표가 따라붙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흥

천과 횡성, 인제는 선거 때마다 인근 지역과 얽히고설키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15~19대 총선까지 흥천·횡성 선거구로 묶였던 선거구는 20대 총선에선 흥천·철원·화천·양구·인제가, 21대 총선에선 흥천·횡성·영월·평창이 됐습니다.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는 15~20대 총선까지 영북지역 속·고·양 3개 지역으로 획정됐다가 21대 총선 당시 인제가 붙었습니다.

이처럼 생활권과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누더기 선거구 획정이 되풀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성과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4개 시·군이 한데 묶인 복합선거구를 지역구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 기준이 낳은 결과입니다. 선거구 획정과 정에서 비인구적 요소를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지역 성향이 다른 지역을 짜깁기하듯 정하는 일이 재발하면 안 됩니다. 더불어 선거를 코앞에 두고 뒤늦게 선거구를 정하는 관행도 사라져야 합니다. 정당과 후보는 물론, 유권자 혼란을 부추겨 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상황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2 20 ()
/ 21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미뤄선 안돼

-특별자치도 정착 때까지 충분한 국비 지원있어야

강원도가 운영비 문제로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기관) 이관을 놓고 난감해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주국토관리청, 원주환경청, 동해해양수산청 등 국가의 사무를 지역적 차원에서 처리하는 특행기관은 10곳으로 강원도로 이관될 경우 지방비 부담이 커 핵심기능만 우선받고, 기관이전은 추후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행기관 이전은 지방분권의 핵심 요구사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전면적으로 이관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행기관은 국가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국가사무를 지역적 차원에서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일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상호 보완적인 성격으로 지역에 상생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당초 바람직한 기구 운용방향이지만, 일각에서는 행정 비용을 증가하고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부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자치, 경찰자치와 함께 특행기관의 지역이전은 대개 역대 정부의 주요 지방분권 과제로 대두돼 왔습니다.

특히 고도의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특행기관의 이전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핵심은 이관된 특행기관의 운영 효율화입니다. 강원도적 특성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운영에 따르는 소요재원을 확

보하려면 이관 초창기에는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행기관의 강원도 이관에 따른 걸림돌을 해소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중앙정부가 능동적으로 필요 사항과 역할을 도출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충분한 예산 지원을 비롯해 중앙부처의 신규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연계성 강화 조치,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요청되는 사항은 한둘이 아닙니다. 강원도가 우려하는 소요재원 문제 역시 특별회계의 세입 구조를 개선 확대하는 방식으로 충분한 지원책 없이는 해소가 어렵습니다.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7개 특행기관의 이관 운영 사례가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의 경험을 제대로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강원도는 규제 완화와 관련된 몇몇 기능 이양에 몰입해서는 단견에 그칠 수 있습니다. 10개소의 특행기관에 대한 전면적인 이관을 추진하되 신속하게 조직을 진단해 체계적으로 정비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지자체와 행정 기능이 중복된 경우도 있고 남발된 조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관의 최적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둔 장기비전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2 20 ()
/ 19

강원도청 신청사 확정 이후의 대책이 더 중요

강원도청 신청사의 춘천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대 건립이 확정되면서 그 이후의 어떤 정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도청사가 이전하면서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해 춘천의 기관들이 그곳으로 옮겨간다면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세워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원도심을 어떻게 리모델링할 건가도 중요하다. 즉,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무슨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차분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원도심 상경기 위축은 불 보듯 하다. 원도심 식당 등은 통행량 등 외부요인에 의해 흥망이 결정되기 때문에 충격 완화를 위한 지혜를 모아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방문객들의 발길을 머물게 할 콘텐츠가 마련되지 않으면 원도심 상경기를 살리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행정과 주민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도심은 도시재생 차원에서 리모델링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원도심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창의적인 아이템을 발굴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다.

아울러 민관, 전문가 등이 상호 협력해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켜야 한다. 도시재생

은 지역의 역사, 문화, 사회,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종합적 형태의 도시 발전 모델이기 때문이다. 단기적 성과도 좋지만 함께 만들어 가는 재생 과정 자체에 더 중점을 뒀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재생의 결과로 원도심이 새로운 창조적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 과정에 지역의 기업을 적극 참여시켜 행정 당국과 주민, 기업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통로가 만들어져야 한다. 도청사 이전 부지가 결정된 이후 강북지역 주민들 사이에 도청사를 유치하지 못한 것보다 도교육청이나 이전을 결정했던 도소방본부 등이 동반 이전해 우두동이 다 공동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또 향후 토지 보상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보상이 시작될 것이다. 거주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데 보상을 받아 대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도청 신청사 건립은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요소들이 동시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지역의 경제 전반에 걸쳐 서로 상쇄되는 구조를 보이게 된다. 긍정적인 요인은 더욱 확장하고, 부정적인 요인은 보완해 도청 신청사 건립이 춘천시의 발전뿐 아니라 강원도가 발전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기회발전특구’ 도전, 지역 성장의 엔진 되기를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영월 평창 정선 등 8개 시·군이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플랫폼이자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기회발전특구’에 도전한다. 이들 시·군에서는 이미 19개 전략산업 지정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춘천은 바이오·정밀의료 산업 중심 기업도시, 강릉 종합물류단지, 동해 북평제2 산업단지 수소산업, 경제자유지구 망상지구 개발사업 등이다. 추진 중인 신성장 동력과 기회발전특구를 연계하는 방안들이다. 기회발전특구 설치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특구 계획을 기다리고 있어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개념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신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과격적인 수준의 세제 및 규제특례,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에 인력과 R&D(연구개발) 인프라를 집중 지원하는 균형발전 프로젝트다. 투자기업에 대해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최대 전액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 중이다. 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은 보탬업 방식이다.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정책의 수혜를 오롯이 누릴 수 있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경우 지역 발전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기회발전

특구를 중심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어 관심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전략산업을 키울 호재다. 경제 성장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이며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첨단화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다. 이미 비수도권 지자체들의 눈은 기회발전특구로 쏠리고 있지만 정작 국회는 법안 처리에 녹장을 부리고 있다. 정쟁에 눈이

팔린 정당과 의원들의 관심에서 밀려나면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전국 어디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도록 제대로 된 정치력을 발휘해 줘야 할 때다. 지금

춘천 원주 강릉 등 도내 8개 시·군 의사 밝혀

지역 미래 먹거리와 연계한 특구 발굴해야

공생할 수 있는 모델만이 새 시대 열 수 있어

지방은 인력과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몰리면서 소멸이라는 존재의 기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국회가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안 될 일이다.

최근 강원도에서 열린 ‘찾아가는 기회발전특구 현장 토론회’에서 강원도 추진 방향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강원도는 기회특구를 활용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첨단화해야 한다. 기업을 유치하고 일 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특구를 발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이용할 복안이 절실하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모두가 공생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 새로운 강원특별자치도 시대를 열어 주길 바란다.